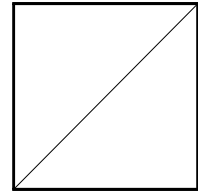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21 호
보 고 연 월 일	2022. 5. 31. (제 10 차)

보
고
사
항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5. 31.

1. 보고주문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제7차 임시 중선위('22.3.11.)에서 (주)셀트리온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의결 시 금감원에 권고한 사항으로서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

- ☐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감리 조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
- ☐ 원칙적으로 감리 조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
 - 연장사유는 금감원 내부 지침으로 정하되, 감리방해와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고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운영
- ☐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추가 안내

※ 외감규정 시행세칙(§34) 개정

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규정(§24⑤4)을 개정

-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는 허용

※ 외감규정(§24⑤) 개정

(2) 피조사자에 대한 문답서 열람 허용시기 개선

□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전) 이후 문답서 열람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정

-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문답서 열람 요구권을 허용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사전 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 외감규정(§25①) 및 시행세칙(§33) 개정

(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구두 자료요청 최소화

□ 감리 조사과정에서 구두 자료요청을 최소화하도록 감리 실무를 개선하고,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한 사후 보완 의무화

※ 외감규정(§24③) 개정

(4) 조치 사전통지 내용의 충실화

□ 조치의 법적근거 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

○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구체화 적시

① 감리위 안전(요약)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제시(지적사항별)

②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

○ 조치 내용 및 적용기준 상세 기재

① 감리위 안전(요약)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 제시**

* 다만, 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치자 간 공모,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의 조정

** 과징금·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산정내역 및 근거, 감사인 지정기간 등 제시

※ 감리실무 개선

(5) 現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지원 [문답시]

□ 감리집행기관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실무 개선

* 감사인은 감사조서 및 재무제표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고, 회사 관계자도 회사 자료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음

- 다만,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생성한 문서로서 감사인의 재산이므로 회사 관계자는 감사조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 감사인도 자신이 감사 중에 입수하여 보관한 자료가 아니라면 추후에 회사 자료를 무단 열람할 수 없음

** 외감규정 제24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는 법인 임직원에게 대한 조사과정 입회 요청 가능

※ 감리실무 개선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5. 안전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관계법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조사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미리 문서로 알리면 감리등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1. 목적
2. 구체적인 요구내용
3.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위
4. 그 밖에 피조사자가 제1호 및 제2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리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생략

⑤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1.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감리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3.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황에 준하여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⑥~⑦ 생략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피조사자는 문답서, 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및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리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문답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게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생략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심사, 감리실시품의) ①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심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31조(소명의 기회제공) 감독원장은 심사,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사, 감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제34조(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 ①심사, 감리반장은 심사 또는 감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또는 감리·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사전통지) ①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기업회계팀	회계심사국
연 락 처	02-2100-2693	02-3145-7702